

2026년 5월 16일 시행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령(Ⅱ)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정답공개 및 이의제기 안내>

1. 정답공개 일시 : 2026년 5월 18일(월) 16:00 이후
2. 정답공개 방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알립니다』에 게시
3. 이의제기 기간 / 방법 : 홈페이지에 게시

법령 I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10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무총리는 10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다시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 ③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물자 또는 업체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 ②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인력자원 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신고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미리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한 경우 그 물자 및 업체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④ 국가정보원장은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문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고, 물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하되, 물자 또는 업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않거나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물자의 생산·수리·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 ③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는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지정 후 1주일 이내에 송달하여야 한다.

문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 및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 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 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 ㄷ. 정부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축한 물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문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기관의 장은 (가)에게 소속 비상대비 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나)에게 임명하여야 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휴업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둘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은/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라)은/는 비상대비업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 업무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u>(가)</u>	<u>(나)</u>	<u>(다)</u>	<u>(라)</u>
①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③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④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문 6.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비상대비 훈련을 면제하는 자를 모두 고르면?

- 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학생
- ㄴ.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해당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ㄷ.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 ㄹ.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문 7.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훈련의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의 훈련실시명령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④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훈련은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간에 협의하여 국무총리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문 8.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는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포함된다.
-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 ㄹ.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무총리는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국무총리는 비축한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같은 종류의 신제품으로 대체 저장 또는 정비를 하거나 저장시설을 보완하는 등 해당 물자의 자연손실 또는 품질과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축한 물자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문 10.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훈련은 실제훈련과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시험제품 생산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있다.
- ③ 훈련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④ 훈련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그 수령자는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문 1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년 이하의 징역이나 (나)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시설보강의 준비조치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효율적인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한 물자의 소유자에게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한 물자의 비축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라)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가)</u>	<u>(나)</u>	<u>(다)</u>	<u>(라)</u>
①	1	500	500	500
②	3	1,000	1,000	500
③	1	1,000	500	1,000
④	1	1,000	500	500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 기본 계획의 심의, 민방위에 관한 각 중앙관서 간의 업무 조정, 민방위대 조직 대상 연령 연장의 심의, 민방위사태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사항을 관장한다.
 - ② 중앙민방위협의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 ③ 중앙민방위협의회 위원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정보원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등이 된다.
 - ④ 중앙민방위협의회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2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분과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기획위원회 및 재난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이 된다.
 - 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및 관계 부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두어야 한다.
 - ③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 명을 연구조사관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실적에 따라 연구비와 조사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민방위협의회 관장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에 관한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확정된 집행 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민방위 계획의 종류에 따른 민방위 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특별시·광역시·도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특별시·광역시·도 계획을 매년 11월 1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단말장치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ㄷ.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기관의 장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인증 신청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고시하는 표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ㄹ.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제조 또는 공급하려는 자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ㄴ, ㄷ

④ ㄱ, ㄷ, ㄹ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 및 점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계획에 따라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 ②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 또는 물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보고 결과를 검토하여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건축물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등 민방위 준비를 명하게 하여야 한다.

문 19. 민방위기본법령상 등화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화관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의 빛을 내는 설비 또는 장비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소등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② 민방위훈련에 따른 등화관제가 활주로등의 등화인 경우 경계관제는 평상시와 같다.
- ③ 야광도료와 같은 빛을 내는 설비·장비 및 그 밖의 물체에 대하여 차광, 은폐, 소등 또는 소광의 방법 등으로 각종 불빛을 통제할 수 있다.
- ④ 건축물·차량·선박·항공기 및 지하 시설 등의 내부 등화로서 외부에 빛이 새 나가지 아니하는 것은 등화관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 20. 민방위기본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 중 그 금액이 동일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훼손한 경우
- ㄴ.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실을 거주지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인 경우
- ㄷ. 직장 민방위 대장이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해체·이전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하는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인 경우
- ㄹ.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대 동원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1. 민방위기본법령상 피해자의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 인공구조물 및 그 밖의 시설물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 ②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드론에 의한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지원의 대상이 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두며, 피해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 22.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민방위대의 기술 및 기능요원의 위탁교육 훈련통지서는 읍·면·동장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 ②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 ③ 민방위기본법령에 따라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 중인 직장 민방위 대원이 귀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대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두어야 한다.

문 23. 민방위기본법령상 재해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민방위대원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 ㄴ. 장애 보상금을 받은 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장애 보상금을 뺀 금액을 재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ㄷ.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어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재해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50%를 지급한다.
- ㄹ. 민방위 대장은 민방위기본법령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치료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읍·면·동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문 2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편성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을 고르면?

- ㄱ.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 ()월 ()일까지 편입 조치를 마쳐야 하며, 전입자·퇴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입 신고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신고가 있는 때에 즉시 민방위대에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 ㄴ.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발생한 자나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날부터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ㄷ.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그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그 이동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① 39 ② 57 ③ 71 ④ 103

문 25. 민방위기본법령에서 정한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 중 “공공기관 및 업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
- ㄴ.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ㄷ. 시·군·구 및 교육청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 ㄹ. 특별자치도에 소속된 공공영조물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26.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 및 그 절차와 신상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소속 예비군대원에게 전입·전출·퇴직·사망 등의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ㄴ. 공익법무관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보충역의 병은 법무부장관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후에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 편성한다.
- ㄷ. 지역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원을 시·군·자치구 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 ㄹ.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중요시설 중 분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경우에도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 | | | | |
|---|-------|-------|-------|------|
| ① | ㄱ(O), | ㄴ(O), | ㄷ(X), | ㄹ(O) |
| ② | ㄱ(O), | ㄴ(X), | ㄷ(O), | ㄹ(X) |
| ③ | ㄱ(X), | ㄴ(X), | ㄷ(O), | ㄹ(O) |
| ④ | ㄱ(X), | ㄴ(X), | ㄷ(X), | ㄹ(X) |

문 27. 예비군법령상 직장예비군의 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방부장관이 예비군의 운영 실태 확인·점검과 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평가를 위해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해당 직장예비군이 최근 5년간 2회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수임군부대의 장은 직장 예비군부대가 자격을 갖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6개월 이상 임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직장을 단위로 80명의 그 소속 예비군자원을 1년 이상 소대로 편성하여 직장예비군을 운영한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직장을 단위로 10명의 그 소속 예비군자원을 1년 이상 분대로 편성하여 직장예비군을 운영한 직장의 장은 그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문 28. 예비군법령상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비상근예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방부장관은 그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500명 정원의 단기 비상근예비군을 선발하고자 하였으나,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한 경우에는 수시 선발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평시에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단기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국방부장관은 선발된 비상근예비군이 질병 및 심신장애, 직무수행 능력의 부족, 불성실 복무 및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집을 중단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7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단기 비상근예비군의 정원을 정한다.

문 29. 예비군법령상 동원응소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있는 甲은 동원명령 발령 후 12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해야 한다.
- ②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인접한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에 있는 乙은 동원명령 발령 후 12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해야 한다.
- ③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 외의 육상 지역에 있는 丙은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해야 한다.
- ④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는 丁은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해야 한다.

문 30.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동한 예비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 ②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이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공비를 소멸시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한 예비군은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 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 ④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의 장이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무를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문 31. 예비군법령상 긴급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군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을 검문할 수 있다.
- 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려면 긴급조치의 내용·기간·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주민의 소개(疏開) 또는 피난 명령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32. 예비군법령상 휴업보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은 국가데이터처가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②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휴업 사실과 진료 기록부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야 한다.
- ④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문 33. 예비군법령상 긴급조치에 따른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방부장관은 긴급조치로 인하여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그 형상, 가격(시가를 말한다),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손실증명서를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ㄴ.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ㄷ.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 ㄹ.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4.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방부장관은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훈련은 복무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한다.
- ② 외국에 여행 중인 예비군대원인 국회의원은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 ③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 ④ 예비군대원을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문 35. 예비군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원된 예비군에게는 동원된 기간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 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하지 아니한다.
-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있다.
- ③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대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학교의 장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지역예비군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대와 직장예비군 중 어민예비군 중대 이상의 부대에 대해서는 부대운영을 위한 부대 운영비를 지급한다.

문 36. 예비군법령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시·사변이거나 적 또는 무장폭도와 교전 중에 작전지역에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동원된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④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문 37.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 ㄴ.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ㄷ. 직장방위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ㄹ.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직장방위협의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은 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산업단지 방위관련 기관의 관계관(關係官), 그 밖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의 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계획에는 재난예방 및 국민의 안전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 동안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문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기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ㄴ. 심의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임명한다.
- ㄷ.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ㄹ.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문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은/는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나)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까지 재난관리 실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대상자가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응급부담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가)	(나)	(다)	(라)
①	국무총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매년 3월 31일	20일
②	국무총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전년도 12월 31일	15일
③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매년 3월 31일	15일
④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전년도 12월 31일	20일

문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활용하는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 ㄴ. 재난피해 보상 기능
- ㄷ.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 ㄹ. 에너지 공급 시설 피해 방지 기능
- ㅁ. 사회질서 유지 기능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문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호우 또는 태풍에 관한 예보·경보·통지에 대한 설명이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가)밀리미터 이상이면서 (나)시간 누적 강우량이 (다)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경우
-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라)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경우

	(가)	(나)	(다)	(라)
①	30	2	150	72
②	30	2	90	42
③	50	3	90	72
④	50	3	150	42

문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대비능력 보장 및 긴급구조대응계획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현장지휘대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그 중 권역현장지휘대는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운영한다.
-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신규교육을 받은 후 1년마다 정기교육으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에는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고,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중 긴급구호에는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 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소방청장·경찰청장은 매년 시·도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문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여야 한다.
- ㄴ. 교통수송분야의 지정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교통 체계(물류체계를 제외)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 ㄷ. 보건의료분야의 지정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의료(응급의료를 포함)·약사(藥事)·혈액관리 등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 ㄹ. 원자력분야의 지정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및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ㄱ	ㄴ	ㄷ	ㄹ
①	O	O	X	X
②	O	X	X	O
③	X	O	O	X
④	X	X	O	O

문 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의 동원을 포함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그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 ㄴ.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헬기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후 운항하여야 한다.
- ㄷ. 시·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 ㄹ.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 긴급구조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장소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문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중이용시설등의 관계인이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위기상황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 ㄴ.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 ㄷ. 위기상황 대응조직의 체계
- ㄹ. 위기상황별·단계별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안전사업 추진개요, 안전사업 추진기간, 안전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인력 등의 내용, 지역주민의 안전사업 추진에 대한 참여방안, 안전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가 포함된 추진 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백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안전사업의 추진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문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순간 최대 인원이 1천명 이상으로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도로·공원·광장
 ㄴ. 1일 이용객이 5천명 이상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ㄷ. 1일 이용객이 5천명 이상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ㄹ.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ㅁ.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문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으로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이 발생하여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할 수 있다.
- ㄴ.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 ㄷ.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조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그 협의는 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를 지원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문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 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9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ㄷ.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29층 이하의 공동주택
- 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
- ㅁ.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차 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① ㄱ, ㅁ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ㄷ, ㄹ

응시자 주의사항

1.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나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2. 시험시작 즉시 문제 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하실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 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